

전통식품 활성화 노력 박차

전북도, 체험시설 지원

전북도는 잊혀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체험시설을 지원 체험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까지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 8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체험장을 설치하고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

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국내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안전하고 건강한 전통방식 제조 방식과 다양한 오감체험 거리로 전통식품의 소중함을 부각시키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도내 8개소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성공 모델로 확산시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2018년에 준공된 영농조합법인 도구골민장은 전통 장류에 대한 소비자 변화에 발맞춰 된장, 간장, 고추장 등 도구골 내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킨 저염식 도구골 숙성 장류, 발효박

상 흡스테이 및 발효학교 대표 제품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2018년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융복합화산업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이 지역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 등 많은 소비자에게 장류 등 전통식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전통식품 체험시설이 지역 활성화에 판단된다"며, "도내 선정된 8개소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해 관광 상품과 연계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환영... 수입규제 유지

WTO "한국수입규제, 협정에 합치" 판정 정부 "1심 패소 후 관계부처 노력한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한 데 대해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분쟁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

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WTO 분쟁은 2013년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지 인근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 WTO 분쟁은 2013년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지 인근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50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농산물의 경우 13개 현, 26품목의 수입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습 검사를 진행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핵종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자 정부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 적용해 왔다. 농산물 수입 제한도 14개 현의 27품목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일본산 주요 수산물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성정책관은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약 2~3만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명태는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일본산이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대체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는 두 달 뒤 상소를 제기해 이번에 결과를 뒤집었다.

/뉴시스



전북도가 지난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청년혁신가 83명을 비롯해 130여명을 초청해 공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본격화

도·창조센터, 멘토·담당공무원 등 공개 오리엔테이션 가져 교육·컨설팅·시제품 제작·크라우드 펀딩 등 원스톱 지원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청년혁신가 83명을 비롯해 지역전담 멘토, 교육운영기관, 담당 공무원 등 130여명을 초청해 공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청년혁신가는 지역 고유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융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공모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

업 지원사업'을 통해 51팀 83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작물 및 관광상품 개발, 농식품 산업 분야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 등 혁신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소득 발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분노, 악취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혁신 아이템을 제안했고, 도는 디자인생각 전문교육 및 지역 전담

1:1 멘토링 등 사업계획 전반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현장에서의 성장을 지역 멘토가 함께 도움으로써 기존의 컨설팅과는 차별화된 체계형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이끌 계획이다.

특히, 교육 후 최종 사업화 지원팀으로 선정되는 청년혁신가는 시제품 제작 지원,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창업과정까지 도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의 디딤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민의 가치를 청년시각으로 재발견하고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지역을 다시 지켜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도, 대형 건설사업장 방문 추진

전북도는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주 2차례씩 시군에서 발주한 도내 대형 건설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지역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대형 건설사업장 방문을 시작으로, 시군 대형 건설사업장을 본격

적으로 방문한다.

지난 12일 전북도는 대한전통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전주 인후더샵 신축공사현장을 비롯한 5개소 사업장을 방문하여 도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인력과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하여 줄 것과 건설공사 추진 시 불법하도급 방지, 체불임금 예방 등 건설산업기법준수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전주시에선 시군에서 처음으로

전북선관위,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위한 민주시민교육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남원한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유권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유권자 연수는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치참여 의지를 높이고 참

정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체험 등 강의와 선거체험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앞으로 전북푸른학교, 전주동안차량학교, 전주은화학교, 정읍다솜학교 등에서 장애인 유권자 및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공고 제2019-872호

익산배산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익산시 모현동2가 671번지에 대한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모현동2가 671번지 일원	- 공공청사 부지(3,304.8㎡) 변경 ▶ 공공청사(대기오염집중 측정소) : 1,637㎡ ▶ 로컬푸드 직매장 : 1,667.8㎡

2. 변경 사유 : 공공청사(동사무소) 부지를 대기오염집중측정소 및 로컬푸드직매장이 설치가능한 용도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익산시청 건설국 도시개발과(063-859-5591)

5. 기타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도서 : 별첨(계제생략)

2019년 4월 15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